

2024년 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2.

외교통일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4
가. 국내반	4
나. 재외공관반	6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8
6. 주요감사 실시내용	10
가. 외교부 소관	10
나. 통일부 소관	59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74
라. 재외동포청 소관	76
7. 증인·참고인 명단 및 주요 신문내용	78
8.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98
가. 외교부 소관	98
나. 통일부 소관	123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30
라. 재외동포청 소관	13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24. 10. 7.(월) ~ 10. 25.(금) 【19일간】

3. 감사대상기관

국 내	재외공관(24개 공관)
가. 외교부	(미주반)
나. 통일부	① 주미국대사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② 주유엔대표부
라. 재외동포청	③ 주뉴욕총영사관
마. 한국국제협력단	④ 주멕시코대사관
바. 한국국제교류재단	⑤ 주과테말라대사관
사. 재외동포협력센터	⑥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아. 한·아프리카재단	⑦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⑧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⑨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구주반)
	① 주오이시디대표부
	② 주프랑스대사관
	③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 주 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④ 주유네스코대표부
	⑤ 주스페인대사관
	⑥ 주포르투갈대사관
	⑦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⑧ 주알제리대사관
	⑨ 주튀니지대사관
	⑩ 주이집트대사관

	⑪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아주반) ① 주인도대사관 ②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③ 주중국대사관 ④ 주일본대사관
--	---

4. 감사반의 편성

가. 국내반

○ 위원 21인

○ 감사기간 : 3일간 【10.7(월), 10.8(화), 10.24(목)】

(○ : 위원장, △ : 간사)

감사반장	외교통일위원장	○ 김 석 기 (국민의힘)
감사위원	외교통일위원	△ 김 영 배 (더불어민주당) 권 칠 승 (") 위 성 락 (") 윤 후 덕 (") 이 용 선 (") 이 재 강 (") 이 재 명 (") 이 재 정 (") 조 정 식 (") 차 지 호 (") 한 정 애 (") 홍 기 원 (") △ 김 건 (국민의힘) 김 기 웅 (") 김 기 현 (") 김 태 호 (") 안 철 수 (") 윤 상 현 (") 인 요 한 (") 김 준 형 (조국혁신당)

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전문위원(이사관) 행정실장(부이사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서기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입법조사관(행정주사) 행정관(행정주사) 주무관(사무주사) 주무관(사무주사) 주무관(행정주사) 속기주사(3인) 보좌관 (21인) 정책연구위원(1급상당) 정책연구위원(2급상당) 정책연구위원(4급상당)	송 병 철 김 사 우 김 형 진 임 주 현 이 규 희 백 장 운 남 정 희 노 세 현 김 경 준 안 미 옥 유 승 연 조 향 순 양 창 성 전 진 향 권 오 정 김 나 영 손 선 락 김종수(더불어민주당) 김인영(국민의힘) 채규영(더불어민주당) 김연희(국민의힘)
-------------	--	--

나. 재외공관반

□ 미주반

- 위원 8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 감사위원 : 위성락 위원, 이용선 위원, 조정식 위원, 차지호 위원, 한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위원, 인요한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외 2인
-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10일(목) - 10월 21일(월)]
- 대상공관(9개 공관)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구주반

- 위원 5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위원 : 권칠승 위원, 이재강 위원(더불어민주당)
김기웅 위원(국민의힘)
김준형 위원(조국혁신당)
 - 직 원 : 김사우 전문위원 외 2인
- 감사기간 : 12일간 [10월 10일(목) - 10월 21일(월)]
- 대상공관(11개 공관)
주오이시디대표부, 주프랑스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스페인대사관, 주포르투갈대사관,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아주반

- 위원 7인, 직원 3인
 - 감사반장 : 김 건 위원(국민의힘)
 - 감사위원 : 윤후덕 위원, 이재정 위원, 홍기원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위원, 안철수 위원, 윤상현 위원(국민의힘)
 - 직 원 : 김형진 행정실장 외 2인
- 감사기간 : 10일간 [10월 10일(목) - 10월 19일(토)]
- 대상공관(4개 공관)
주인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7.(월) 10:00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8.(화) 10:00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0. 10.(목) ~ 10. 21.(월)	[미주반] ○ 주미국대사관 ○ 주유엔대표부 ○ 주뉴욕총영사관 ○ 주멕시코대사관 ○ 주과테말라대사관 ○ 주엘살바도르대사관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해당 재외공관	- 주유엔대표부에서 합동 감사 - 주과테말라대사관에서 합동감사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합동감사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0.(목) ~ 10. 21.(월)	[구주반] ○ 주오이시디대표부 ○ 주프랑스대사관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 주유네스코대표부	해당 재외공관	- 주오이시디대표부에서 합동감사
	○ 주스페인대사관 ○ 주포르투갈대사관 ○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 주스페인대사관에서 합동감사
	○ 주알제리대사관 ○ 주튀니지대사관		- 주알제리대사관에서 합동감사
	○ 주이집트대사관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주이집트대사관에서 합동감사
10. 10.(목) ~ 10. 19.(토)	[아주반] ○ 주인도대사관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주중국대사관 ○ 주일본대사관	해당 재외공관	
10. 24.(목) 10:00	[종합감사]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6. 주요감사 실시내용

가. 외교부 소관

(가) 외교부

1) 본 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반외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 ○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과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할 경우, 석유가격 폭등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에 대한 질의 ○ 중동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중동전쟁과 같은 상황에서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대비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 ○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4일 전에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 및 대통령 순방 취소에 따른 위약금 액수 등 질의 ○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은 성과로 평가되나, 한러 및 한중 관계 악화와 남북 관계의 긴장 고조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상황 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 필요 ○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 자유 지수의 하락, 대통령 순방 중의 발언 실수, 영부인 리스크, 챔버리 및 부산 엑스포 등의 문제로 국격 실추 지적 ○ 최근 한중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 한국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우리 정부의 인태(인도·태평양)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간 차별점 및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 상황에 대한 질의 ○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 갈등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지역 내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 ○ 우리 정부의 ‘쿼드 플러스’ 등 인태지역 내 협의체 참여 의향 여부 및 검토에 대한 질의 * 쿼드(Quad) :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 ○ 새롭게 들어설 미국 행정부와 일본 내각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협의를 위해 노력 당부 ○ 북한 해킹 조직원에 대한 정보 파악과 함께 북한 해킹 조직 확장과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 ○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감시 및 차단 활동 강화를 위한 계획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질의 ○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사죄와 반성, 10억 엔 지원, 교육 및 추모, 양국 간 화해 및 해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반하는 일본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할 것과 일본이 합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임을 비판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배소 판결 강제집행 관련, 일본의 수령 거부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 각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 일본의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과거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므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필요 ○ 7광구 문제와 관련하여, 39년 만에 열린 이번 한일 공동위원회에서는 일본이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바, 협력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내년 6월부터 한일 간의 협정이 만료되며, 이 시점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 ○ 7광구 문제를 외교적·경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및 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협력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일본의 장관이나 총리의 역사 왜곡 발언 253회에 비해 한국에 대한 사과는 78회에 불과, 2023년 3월 6일 제3차 변제 협정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과 독도 망언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촉구 ○ 한일관계 해결에 있어 여야 상황 등 정치적 고려 필요 ○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아 있는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표명 ○ 레바논 동명부대가 헤즈볼라 근거지와 가까운 위치(2.7km)에 있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인한 오폭 또는 의도적 공격 위험이 있으므로 유엔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제적 철수를 검토할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우려 표명 및 외교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 ○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가 대두, 미 대선 이후 미국의 경제·무역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한국 기업들의 더욱 철저한 대비와 민관 협력 강화 필요 ○ 트럼프 前 대통령 재당선 시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와 동맹 관계 재조정 등의 압박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및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의 필요성 강조,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 강화 요구 ○ 일본은 적대적 북중러를 상정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 아시아판 NATO를 언급. 일본의 핵 공유, 역내 핵무기 도입, 헌법 개정, 자위대 파견, 일본의 국방 예산 증가 등은 한반도에 큰 리스크라고 보는바, 적대적 북중러를 상정함에 따른 한반도의 전초 기지화 우려 ○ 국제정세의 급변, 일본이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 우리도 과거의 핵무장에 대한 부정적·소극적 생각을 바꾸고 자체 핵무장 추진 검토 필요 ○ 한미 간 신뢰 강화 및 핵무장 배제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 필요 ○ 최근 한일관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양국 국민들이 상호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바, 한일 간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행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담조직 마련 등 지속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배경 조성 필요 ○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제도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일본의 수송기 등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며 新한일관계, 성숙한 모습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마련 필요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사도광산 추모식과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해 양국 간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 제시 필요 ○ 한일 정상화 60주년 관련 일왕 방한 가능성 질의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 14명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방안(분사, 分祀) 제시 및 이를 통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제안 ○ 현 정부의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응하는 외교 언어가 거칠고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외교적 옵션을 상실하게 될 부담이 있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바, 외교부의 건설적인 역할 당부 ○ 캄보디아 순방 시 영부인의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 배경 질의 ○ 의료대란 관련, 국외 출장 진행 및 취소에 대한 이유 질의 ○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차 방영 관련 사항 질의 ○ 2024년 7월 북한 인권간담회 시 영부인 발언 작성 관련 사항 질의 ○ 트럼프 당선 이후 소통 채널 및 향후 협상에 대한 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책 질의 ○ 향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질의
경제외교	○ 체코 원전 수출 협상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준비 부족과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부족 지적 ○ 한미 간 원전 기술 협력 합의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 특히 원전 관련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의 요구가 미국의 원전 패권우려와 맞물려 체코 원전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철회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우호적, 전통적 경제교역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 대립을 하며 우리의 외교 지도, 경제 지도를 스스로 고립·위축시키면서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역주행함을 지적 ○ 한미동맹의 기반을 전제로 한 평화외교, 경제외교, 실용외교의 중요성 강조 ○ 우리 기업의 러시아 철수 등의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 ○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의 중요성 등을 감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HBM 메모리 반도체 및 우리 기업 포함 우려 ○ 희토류 등 광물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근간에 큰 균열이 올 수도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의 요청에 의해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이 되었는바, 수락하게 된 경위 질의 및 우리의 MSP 의장국 수락으로 인해 중국과 희토류 관련 적대적 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계 발생 우려 ○ 호주에서 진행되던 더보 프로젝트 2,3단계에서 한국의 현대엔지니어링이 배제된바, MSP 의장국이 되었음에도 리스크만 있고 실익은 없는 상태이므로 MSP 의장국은 시기상조임을 지적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 진출 우리 기업들이 보편관세, 보복관세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음.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TF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필요 ○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부과 등에 대한 가능성 여부 질의 ○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빅테크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 질의
개발협력 (ODA)	○ 현재 ODA 규모가 6조 3000억 원을 넘어섰음에도 부처별로 분절화된 ODA 사업의 비효율성 지적,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 사업 및 비효율성 발생, 이로 인한 국민 세금 낭비될 위험 제기 ○ ODA의 컨트롤타워가 없으며, 외교부와 KOICA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제안 ○ 유상 ODA와 무상 ODA가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무상 ODA의 경우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각각 진행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6대 ODA 개선방안으로 사업평가 및 기관역량 진단 절차 효율화, 시행기관 수 축소, 소액 ODA 사업 폐기, 수원국 및 사업 수 축소, 외교부의 ODA 총괄, 혁신적 개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발 재원 마련 및 민관 파트너십 증진 제안 ○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 ODA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이에 기재부가 여러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필요 ○ 친한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연수 사업 (ODA)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조실에서 통합 관리 중인 약 30개 기관의 연수사업 명단을 코이카와 외교부에 공유할 필요 ○ 작년부터 기재부의 對미얀마 EDCF 사업이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OICA나 외교부가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여건 마련 필요 ○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등 ODA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현재 코이카 소유 두 곳의 남미농장이 사실상 방치중인 상황임.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46년째 매년 25만불의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민간 임대를 통한 개발 등 활용 방안 검토 필요
사도광산	○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는 보도가 있는바, 추도식 관련 우리측 요구 내용 및 주최·주관·참석자 범위 질의 ○ 사도광산 전시관은 앞 전시관에 한반도 출신을 포함한 광산노동자의 차별 및 고난의 내용이나, 다음 전시관은 광산노동자의 복리후생 관련 내용으로 앞 전시관의 내용과 상반됨을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 전시관에 강제노동을 확인하는 내용의 한국말 번역본이 없음을 지적 ○ 사도광산 전시관의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표현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문제 제기 및 '조선인'으로 수정할 것 요청 ○ 사도광산에 전시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자료들 중, 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의 미지급 임금이 예탁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이 명부에 대해 확인, 확보 및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사도광산 전시 내 조선인 및 강제노동 명칭 지적 및 협상 필요 ○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 회피 태도를 비판하고 'forced labor'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용어이므로 이를 전시와 기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협상력 발휘 필요 ○ 대사의 연설문 관련 작성 정황 및 내용 지적 ○ 사도광산 추도식 내 일본 총리 참석 가능성 질의 ○ 사도 광산 전시실 내 시설 낙후 사항 지적 ○ 일본의 아시오 광산 및 구로베 댐에 대한 추가등재 관련 외교부의 향후 대응 방침 질의
부산 엑스포 유치	○ 엑스포 유치 투표와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극도로 과장된 정보를 유통하여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끔 한 점 및 사후 정부와 외교부가 해당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지적 ○ 엑스포 유치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잦은 순방 및 그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로 인한 예산 낭비, ODA 동원, 재외공관 설치 약속 등 사후 대처가 곤란한 정책들을 남발한 점 지적 ○ 엑스포 판세 분석 문건의 공개의 공익성, 비밀 보호 기간이 끝났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한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외교부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지적 ○ 기밀문서의 공개가 법적·외교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 필요 ○ 3급 비밀문서(외교본부와 재외공관의 판세 분석)의 누출은 범죄행위이며,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공개된 문서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면서 형식적인 규정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 ○ 투표 일주일 전에 전 공관에 배포된 암호화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 제기 및 외교부의 암호화 체계 보안 강화 필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 2026년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 등과 같은 복지 개선 필요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협상의 새로운 변수 제기 우려 ○ 12차 SMA 조기 타결은 협상 공백을 방지하고 미국 대선 전에 합의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협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소요형 방식 전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총액형 방식이 재정 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율성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지적 ○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 관련 21년 국회 부대의견 중 물가상승률 증가율 적용과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부담하지 말라는 것이 반영된 것에 대한 평가 ○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 관련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고용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논의 등에 대한 질의
북핵해결 및 통일외교	○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최근 발표한 정당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 미국 내 일부에서 핵 군축을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우선시하는 주장의 등장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비핵화 논의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통한 자주국방 강화 필요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당정책에서 북핵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사라진 것 지적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신중한 대응 필요 ○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와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이러한 변화는 남한과의 영토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 심화 초래, 더 나아가 1991년 체결된 협정인 남북기본합의서의 근본적 파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 및 이에 대한 우리 정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부의 억제 전략 강화 필요, 미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 강화 필요 ○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법 준비 필요 ○ 일본이 핵무기 6천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 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바,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 지적 ○ 핵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미 대선 전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NLL은 지금까지 힘의 논리로 유지된바, NLL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리적인 대응 전략 필요 ○ 지난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현재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음을 지적 ○ 미 하원의원 48명(민주 44, 공화 4)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HR1369)의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아직 통과되진 않았으나, 미국 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의원들과의 한반도 평화 추진을 위한 토론 등 더 많은 지지 획득 방안 모색 필요 ○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바, 이를 막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질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개황 질의 ○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로 러시아가 승전하게 될 경우,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질의 ○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 고립 상황에서 NPT 탈퇴라는 도박적 선택을 통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음. 이번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의도와 행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회피적인 태도와 미국 및 NATO의 신중한 반응을 언급하며 한국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발표가 참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NATO 회원국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도 맺지 않았으므로 살상 무기 지원은 위법함을 강조 ○ 주한 러시아 대사 조치 관련 사항 및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 고려 기준 질의 ○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 질의 ○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핵 기술, 핵잠수함 등 고도의 신기술 이전 우려 지적 및 철저한 감시 및 대응 주문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서 북중러 관계에 대한 의구심 제기 및 우리 정부의 중국과의 소통 채널 부족 지적, 향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강조 ○ 북한군 파병에서의 한미일 공조에 대한 사항 질의
영사서비스 및	○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 이용 시,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 큰 제약이 있음을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재외국민 보호	○ 외교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재외동포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 기대 ○ 재외동포 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제고, 신분 인증 과정 간소화하여 중요한 인프라 제공,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국회의 필수적 협조(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 요청 ○ 필리핀 한인 납치 살해 사건 관련 전 필리핀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배상도 공식적으로 표명한바, 현직 필리핀 경찰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유가족에게 필리핀 정부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 필리핀 한인 납치 살해 사건 관련, 신병확보가 지연된 것과 외교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지적 및 교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당부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독도에 대한 오폭기 사항 지적 ○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9개국의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원칙적 방문 금지 및 예외적 경우에 한해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나, 최근 5년 동안 허가된 건수는 약 2만 7천 건, 여행금지국에서의 해외 로밍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 지적 ○ 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여행금지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안 제안 ○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통신사 협력을 통한 현황 파악, 이를 기반으로 고소·고발 조치 등 적극 방안도 함께 강구 ○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 10월 2일 대통령이 군 자산을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철수 지시 후, 실제로 수송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영공을 통과해야 하는 10개 국가와의 협의 미비 및 안전 관리 부족 등)과 철수 권고와 실제 철수율 사이의 차이, 수송비용 부담 문제 등 제기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	○ 특임공관장의 임명이 외무공무원 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정치적 임명이 지속되고 있어 외교 인프라 약화와 일선 외교관들의 사기 저하 초래 지적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인사 검증 자료가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 ○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개편되면서 북핵문제 담당 기능, 비중 약화 우려 ○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미국 국무부에 있는 정책기획이나 정보조사국(INR) 기능과 유사한 듯 하나, 미국의 경우 정책기획·정보분석·북한정책이 하나의 부서로 있지 않은 바, 정보부서와 정책부서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정보분석의 업무 성격상 계속성이 요구되어 외교부의 순환보직 업무형태와 맞지 않는 바,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우리나라는 정보협력 커뮤니티가 부재한 바, 외교정보 기획국이 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정보 커뮤니티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미 국무부 INR과 MOU 체결, 국립외교원도 INR과 협력서 체결한 바, 혼선이 없는지,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질의 ○ 외교부 징계 59건 중 47건이 공관에서 발생하는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받고 있음에도 관련하여 매년 고위공무원 해임건이 발생하는 바, 개선방안 검토 당부 ○ 외교부의 정원이 2008년 G20 가입 이후 정체 상태이며, 주요국 외교 인력 현황과 비교 시 매우 부족하므로 외교부 인력 확충 필요 ○ 외교부 내 과학기술 외교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하므로 미국(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 핵심신기술특사실), 영국(경제과학기술국), 일본(군축비확산과학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구나 전문 인력 채용 강화 ○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기 저하 심각 및 민간으로의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 역대 정부에 비해 군 출신 특임공관장이 많은데, 외교적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임공관장 검증 절차 필요 ○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해외 취업 관련 외교부 차원의 관리 필요 ○ 98%의 공관에 도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로 전자파 차폐 방식으로, 첨단장비인 레이저 도청방지 장비는 37%만 설치되어 있음. 25년도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신속히 전 공관에 레이저 도청방지 장비 확대 설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VMware프로그램의 보안성 관련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공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방문 및 정보 요청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회피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외교부장관이 사용하는 삼청동(행사동)과 궁정동(주거용)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행사 시 필요한 설비나 인력 관리의 비효율성 발생 및 여러 가지 불편 초래 지적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3.25.4.3.간 열렸고, 불과 3주도 안되어 전체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KF-21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공급하는 독일 회사(딜 디펜스, Diehl Defense)에 대한 북한발 해킹 공격에 대한 외교부의 정보 수집 능력 부족 지적 -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수집 능력 보고체계가 외교부 내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와 제7조 간 양립하지 않는바, 명예영사 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예규 보완 필요 ○ 현재 주한명예영사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하여 주한 명예영사 정리 필요 ○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내용 간 편차가 있는바, 아프리카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 관리 노력 필요 ○ 정부, 국회, 학계와 민간 및 파트너들과 전략적인 논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를 구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절차, 제도를 구조화할 필요 - 재외공관이 전략적인 보고서 연간 한두 차례 발간, 국책연구기관하고 및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정책청문회 형식의 토론의 장 마련, 한일의원연맹·한중의원연맹 등 전략대화 채널 마련 제안
기 타	○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장례식에 외교부의 화환이나 조문이 없었음. 외교부가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절차적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루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 제기 ○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 행사 문제 질의 ○ 주일대사의 '일미한' 관련 발언 문제 지적 ○ 아세안 정상회의 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앙코르와트 방문)에 영부인의 참석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한 질의 ○ 미국의 인권 단체 간담회에서 영부인이 북한 청소년 30명이 남한 드라마나 콘텐츠를 시청한 혐의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이러한 민감한 정보 전달 시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신중한 정보 제공,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경고 필요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종식 결의안」이 회원국에게 탄약, 무기,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동 결의안에 기권한 것인지 질의 ○ 일본 시민단체가 매년 추도식을 거행하는 우키시마호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침몰 사건의 경우, 이번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식화한 행사 추진 건의 ○ 우천사(유텐지)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 275위의 송환을 위해 일본과 협의 필요 ○ 우키시마호 명부 전달에 따른 향후 진상 파악 계획 질의 ○ 우키시마호에 대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외교부 내 조사 팀 필요 ○ 뉴욕총영사의 공식행사(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절을 ‘미국에 감사하는 날’로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 지적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료 채취를 통한 조사 및 관련 보고서 확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바, 과학적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우리 국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 ○ IAEA 보고서 관련 후쿠시마 폐로 계획 및 오염수 방류 관련 사항 질의 ○ 후쿠시마 사고와 미국의 태평양 내 핵실험의 방사능 유출량 비교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의 우리 해역 유입 가능성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다층적 평가에 대한 IAEA의 전문성 존부 질의 ○ 일본은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후쿠시마 바닷물 검사를 위해 1.6조 원 사용 낭비 지적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재원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라 배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교 안보 구호인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는 과도한 자기과시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소지가 있는데, 이 용어의 계속 사용 점검 필요 ○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유엔인권위 교육권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차별실효그룹 의장 등이 공동으로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조치 질의 ○ 한일 간 출입국절차 간소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 논의의 중단 촉구 ○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측이 ‘다케시마’ 표기 지도를 배포한 문제에 대한 질의 ○ ‘2023 일본 개황’에서 기시다 전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누락 사항 지적 ○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 관련 사항 질의

2) 주미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미국 대선 및 상·하원 선거 전망, 선거 이후 대비 동향 관련 질의 ○ 국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에 있어 미국과의 협의 필요성 관련 질의 ○ NCG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사관의 노력에 관한 질의 ○ 트럼프 당선 시 한미간 북한 비핵화 논의 방향 질의 ○ 글로벌 다중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관계 방향성 질의 ○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논의 상황 질의 ○ 북한 비핵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노력 필요 ○ 8.15 통일 독트린의 방향성 및 미국의 입장 질의 ○ 변화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 ○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협상의 재협상 가능성 질의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미국과의 적극적인 논의 필요 ○ 핵폐기저장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농축 허용이 필요한바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가능토록 외교적 노력 필요
경 제	○ 체코 원전 수주 관련 WEC의 요구사항 해결 위한 노력 필요
영사·기타	○ 한미 의회교류센터 활동에 대한 관심 당부 ○ 대사관 내 외교부와 정보기관 간 업무 분장 당부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내 전시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미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광역 지자체 차원의 한미 문화교류 확대 필요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 계획 질의 ○ 재외국민 안전 전담 경찰 주재관의 총영사관 파견 확대 필요 ○ 플로리다 주 내 출장소 (재)개설 검토 필요 ○ 행정직원 급여 문제 및 청사 노후화 문제 개선 필요 ○ 대사관 내 비위사건 관련 질의

3) 주유엔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다중적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젠다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무대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 필요 ○ 안보리 내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증설 관련 입장 질의 ○ 바이든 행정부, IAEA, 트럼프 후보의 북핵 관련 입장 질의 ○ 해체된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 보완 방안 질의 ○ 북한대표부 관계자 접촉 여부 질의 ○ 대북 제재의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른 전략 확보 필요 ○ 러시아의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 반대 원인에 대한 의견 질의 ○ 대북전단살포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질의 ○ 이스라엘의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기피인물 선언에 대한 의견 질의 ○ 레바논 동명부대의 활동 및 철수 여부에 대한 의견 질의 ○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의 동향을 본국에 전달할 필요 ○ 해양 경계 미확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의견 질의

4) 주뉴욕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광복절 기념식 등 총영사의 발언에 대한 지적 ○ 문화원 정식 개원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 개최 필요

5) 주멕시코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멕시코 정부, 의회 및 차세대 지도자 대상 접촉 및 네트워킹 강화 필요 ○ 주요 대학 내 한국어학과 설치 확대 모색 및 한류 관련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멕시코와 같은 중견국과 지역 질서 형성 기여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필요 ○ 다자간 협력체를 통한 중남미 지원 노력 여부 질의 ○ 멕시코와의 국방/방산 협력 가능성 질의 ○ 쿠바 관련 - 쿠바 방문 시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불가 공지 필요 - 쿠바 내 문화외교 추진 시 협업 모색 필요 ○ 한-멕시코 공무원 간 교환근무 및 연수프로그램 현황 질의 ○ 멕시코 대통령 방한 가능성 관련 질의
경 제	○ 한-멕시코 FTA 관련 - FTA 공동 타당성 조사 등 실시 필요 - USMCA 재검토 시 공관의 대비 상황 질의 - 내년 APEC 정상회의 등 활용한 FTA 해법 모색 필요 ○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국세관 직위 신설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필요 ○ 소노라 지역 한전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의 어려움 살필 필요 ○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영사·기타	○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주몬테레이 분관 설치 및 영사 인력 등 확충 필요 ○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 현황 보고 및 사업 발굴 필요 ○ 양적 완화,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공관 직원 애로사항 질의

6) 주과테말라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과테말라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및 한국 수업 등에 대한 지원 필요
경 제	○ 우리 섬유 기업의 진출 상황 관련 - 트럼프 당선 시 미국시장에 대한 공관에 대응 질의 - 섬유·봉제 사업의 중심 이동에 따른 전망 질의 ○ 한-중미 FTA 발효 시 관련 사항 주의 요청 ○ KOICA 등 ODA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질의 ○ KOPIA의 현재 성과 질의
영사·기타	○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과의 협조 필요 ○ 초청연수 등을 통한 친한파, 지한파 육성 필요

7) 주엘살바도르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탄소배출 감소 노력 관련 중미 국가 협력 사안 공유 요청
경 제	- 향후 교민 기업의 전망 질의 - 엘살바도르 내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장 내 통용 여부 질의 - 한·중미 FTA의 긍정적 효과 유지를 위한 방안 고민 요청 - 국립보건센터 사업의 완료 가능성 질의 - 엘살바도르 교과서 내 일본해 단독 표기 지도 경과 질의
영사·기타	- 엘살바도르 내 CCTV 종합 관제센터 설립 등 성과가 중미 지역 전체로 확대되기를 기대 - 공관원들과 교민들의 치안 상황 질의 - 치안 상황 평가 시 범죄지표 활용, 치안 정책 자문관 파견, 경찰 엘리트 유학 등을 통한 한국의 선진 시스템 전파 필요 - 코스타리카의 심각한 이민 문제에 따른 우리 교민 피해 상황 질의

8)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도미니카공화국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인사 대상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질의 ○ 중남미 지역 치안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질의
경 제	○ 도미니카공화국 신공항 사업 수주 활동 경과 질의 ○ 에너지 협력에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분의 국외 감축분 확보를 감안하여 추진 필요 ○ 중남미 지역 내 직업훈련 센터 개설 추진 필요 ○ 청소년 임신 방지 및 여성 보건 개선 사업 성과 질의
영사·기타	○ 아이티와의 국경을 오가며 생활하는 우리 국민 관련 상황 질의 ○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 필요 ○ 겸임국 외교 예산 현실화 요청을 본부에 적극 제기 필요

9)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총영사관의 노력 질의 ○ 11월 선거에서 한인사회 정치력 제고를 위한 공관의 관심 필요
경 제	○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 예방을 위한 공관 차원의 대응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영사·기타	○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소통과 지원 필요 ○ 치안 문제 관련 영사관 차원의 관심 필요 ○ 유승준씨 관련 비자 거부 문제 질의 ○ 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포함 상황 질의 ○ 공관 인원 충원 및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개설 내용 질의

10)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관련 주시 필요 ○ 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포함 방안 추진 필요
경 제	○ 전문 인력 확보 및 기술 협력 관련 타부처와의 협업 방안 질의 ○ 국민연금, 각 기업의 주재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진출기업 지원 강화 필요 ○ 우리 기업의 미국 노동법 위반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 ○ 우리 유학생들에 대한 졸업 후 유예기간 내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한 대응 필요
영사·기타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문제에 대한 노력 질의 ○ 전세계 평균 대비 낮은 재외선거 등록률 개선방안 필요 ○ 주덴버출장소 개소 필요성 및 공관 노후 상황 질의 ○ 마약류 중독 치료 시스템 환경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수감자 면담 실시 여부 질의

11) 주오이시디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오이시디 사무국 내 파견자 직급 상향 노력 필요
경 제	○ 2022년 6월 오이시디의 사회연대경제 권고에 있어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질의

12) 주프랑스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프랑스의 합계출산을 관련 내용 및 혼외 출산 관련 현황 질의 ○ 프랑스 내 이민 관련 동향 및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 ○ 북한의 고위급 또는 주요 인사 주재국 방문 동향 질의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 현장 내 예측 실패에 대한 원인 질의 - 대사의 유치활동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타 국가의 공개지지 표명 활동 관련 질의 - 대통령, 총리 등 대표단의 파리 방문 시 활동 질의 ○ 파리올림픽 내 소개 사고 관련 대사관의 인지 여부 질의 ○ 프랑스 내 연금개혁 관련 동향 질의
영사·기타	○ 성범죄 등 강력사건 관련 현황 질의 및 관심 제고 당부 ○ 대사관 내 영사 분야 업무 비중 및 사건사고 발생 시 담당 인원 질의 ○ 프랑스 주재 한인 프로덕션의 유학생 대상 피해 사례 등에 대한 관심 당부 ○ 대사관 SNS 내 유용한 정보 게시 확대 등 당부

13)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점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탈북민의 EU 시민권 부여 및 진성 탈북자 구별 사항 관련 질의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NATO의 전망 질의 ○ 러북 군사협력 규탄 관련 NATO 차원의 대북 대응조치 여부 질의
경 제	○ EU의 AI법안 통과 이후 동향 및 영향 질의 ○ UPC 개원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질의 ○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과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질의 ○ 유럽의회 선거 결과의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영향 질의 ○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관련 홍보 필요 ○ EU와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

14) 주유네스코대표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사도광산 관련 -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연설문 내용 관련 경위 질의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이전 대사의 한일 실무협상 참여 여부 질의 - 사도광산 등재 결정 취소 혹은 재협상 가능성 질의 ○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방해 여부 질의

15) 주스페인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스페인 내 이민정책 관련 반응 질의 ○ 스페인의 출산율 관련 정책 및 제도 질의 ○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관련 스페인 의회 내 동향 질의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트렌드 등 정기적 보고 필요 ○ 한·스페인 친선 의원들의 의회 내 위상 질의
경 제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스페인의 지지 여부 질의 ○ 스페인 내 RE100 달성 상황 질의 ○ 유로존 내 기술관사 제도 및 통합 특허법원에 대한 스페인의 불참 이유 질의 ○ 스페인의 에너지 정책 관련 질의
영사·기타	○ 한·스페인 수교 75주년 관련 사업 질의 ○ 스페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한 공관의 방안 질의 ○ 마드리드 한인회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당부 ○ 영사직원 인력 문제 관련 대응 실시 여부 질의 ○ 스페인 내 재외국민 투표권자 수 문의 ○ 스페인 내 인종차별 현황 문의 ○ 공관 노후화 관련 상황 질의

16) 주포르투갈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포르투갈 내 청년세제지원 및 골든비자의 실질적 효과 및 반응 질의 ○ 포르투갈 내 이민 관련 분위기 질의 ○ 포르투갈의 혼인제도 및 선거제도 관련 질의 ○ RE100 달성 관련 포르투갈의 현황 질의 ○ 포르투갈 내 이민 관련 분위기 질의 ○ 양국 간 의회외교의 활성화 필요 ○ 포르투갈의 815 통일독트린 반응 질의
경 제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관련 쟁점 질의 ○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운영 현황 질의
영사·기타	○ 포르투갈의 대형산불로 인한 우리 교민 피해 현황 질의 ○ 총선 투표소 운영 관련 사항 질의

17)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바르셀로나의 오버투어리즘 시위 관련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여부 질의
경 제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현황 및 총영사관 지원 활동 문의
영사·기타	○ 카탈루냐 한인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 현황 질의 ○ 영사관 직제 관련 조직 현황 지적

18) 주알제리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당시 분석 질의 ○ 알제리 내 민주주의 상황 관련 질의 ○ 알제리 내 북한의 동향 및 알제리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 반응 질의
경 제	○ 알제리 대통령의 스타트업 인재 한국 파견 지시 관련 동향 질의 ○ 현대자동차의 현지 법인 상황 등 질의 ○ 공관의 정기 보고 시,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보고할 필요 ○ 젠젠항 컨테이너 항만공사 본드콜 및 미수금 문제 질의 ○ 구매력에 근거한 알제리와의 경제협력 필요 ○ KOPIA 센터 철수 관련 농업 협력 상황 질의 ○ 알제리와의 광물 협력 관련 대화 추진 필요 ○ 사이버보안센터 사업 연기 이유 질의 ○ ODA에 대한 마구잡이식 사업 확대 지적
영사·기타	○ 공관 예산 세부내역 질의 ○ 알제리 내 치안 상황 및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 질의

19) 주튀니지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대북 제재 협조 요청 관련 튀니지의 반응 질의 ○ 목적에 맞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및 시스템 내 기록 필요 ○ 양국 관계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질의 ○ 튀니지의 상·하원 선거 관련 질의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공관의 동향 보고 여부 질의 및 추후 근거 기록 필요 ○ 현지에서의 태권도의 인기 현황 질의 및 문화원 설치 필요
경 제	○ 코이카 사업 관련 최근 예산 증가 추이 및 주요 사업 부문 계획 질의 ○ 튀니지 내 구매력 및 시장 진출 전략 관련 질의 ○ 튀니지 내 스타트업 육성 정책 현황 질의 및 공관 차원의 우리 기업 진출 지원 필요 ○ 현대로템 관련 현황 질의 및 공관의 노력 필요 지적
영사·기타	○ 2023 국정감사 후속 조치에 따른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 증원 경과 질의

20) 주이집트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이집트-북한 간 관계 현황 및 이집트 대사의 북한 복귀 전망 질의 ○ 2025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관계 도약을 위한 계획 질의 ○ 이집트 고위인사의 방한계획 질의 ○ 최근 이집트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질의 ○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공관의 객관적 상황 보고 여부 질의 ○ 이집트의 국방 예산 현황 질의 및 우리 방산 수출을 위한 공관의 노력 당부 ○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예산 집행률 저조 관련 질의 ○ 이집트 내 독도·동해 표기 오류 관련 상황 질의
경 제	○ 홍해 상황에 따른 수에즈 운하 통항 영향 및 향후 전망, 공관의 대응 등 질의 ○ 이중과세 협정 및 비자 발급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질의 ○ 현지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사관의 대응 질의 ○ 이집트의 ACID 신규발급 관련 현황 및 대책 질의
영사·기타	○ 재외국민 사건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질의 ○ 양국 상호 방문객 현황 질의 ○ 최근 이집트 내 사건사고 증가 원인 질의 ○ 환율차손변동수당 관련 현황 질의 ○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관련 공관의 대책 질의 ○ 대사관 내 방탄차량 보유 경위 및 매각 계획 필요성 여부 질의

21) 주사우디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공관의 보고 및 관련 상황 질의 ○ 네옴시티 진행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 여부 질의, 공관의 대처 필요 지적 ○ 검찰총장 상호방문 목적 질의 ○ 문화원 설치 추진 현황 질의 및 공관의 문화 보급에 대한 노력 당부
경 제	○ 원유 결제화폐 문제 관련 공관의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 보건 의료 MOU 이행 현황 및 개정 완료 여부 질의 ○ 벤처공동펀드 조성 완료 여부 및 양국기업 지원 조건 질의
영사·기타	○ 사우디 내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종류 및 방문객 수 질의 ○ 중동정세 관련 사우디의 참전 가능성 및 교민 안전에 대한 대책 여부 질의

22) 주인도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인도 경제 전망 및 모디 정부 3기 집권 성공 배경 질의 ○ 인도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 추구 배경 질의 ○ 우리나라와 인도의 인태전략 차이점 질의 ○ 인도 측 인태해양구상(IPOI)과 협력 현황 질의
경 제	○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 실질 협력 성과 부족 이유 질의 ○ 한국과 인도의 상호 희망사항 괴리로 관계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방안 질의 ○ CEPA 개선 협상 및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현황 및 전망 질의 ○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LG화학공장 유독물질 누출로 인한 양국관계 악영향 방지를 위한 공관 차원의 관심 당부 ○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 질의 ○ 한-인도 교역과 일-인도 교역의 차이 원인 질의 ○ 지방정부와 우리 기업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질의 ○ 인도 내 파업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 원인 등 파업 상황 질의 ○ 인도에 대한 방산 수출 준비 현황 질의 ○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 질의 ○ ODA 담당 부처 및 사업 건수 등 질의 ○ 對인도 ODA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 지적
영사·기타	○ 인도 내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현황 질의 ○ 김해 허왕후 기념관 관련 상황 질의 ○ 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대사관 차원의 계획과 전략 보고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필요 ○ 상주 공관 추가 개설 필요 여부 질의 ○ 공관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필요 여부 질의

23)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대통령 국민방문 성과 질의 ○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 질의 ○ 우즈베키스탄 상원 내 ‘한-우즈벡 경제협력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배경 질의 ○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 및 실적 질의 ○ 한국문화원 설립 건의 관련 필요성 및 소요 예산 질의 ○ 우즈벡-북한 관계 질의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즈벡의 러시아에 대한 기조 및 타 국가들과의 전반적 외교관계 질의
경 제	○ ODA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질의 ○ OECD DAC 관련 효율 극대화 필요 및 他 선진국들의 현황 보고 및 건의 당부 ○ ODA 분절화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 및 공관의 역할 강화 당부 ○ 우즈벡에 대한 임팩트 있는 ODA추진 당부 ○ 우즈벡과의 광물협력 성과 질의 및 활성화 필요 ○ 원전사업 관련 한계 극복 방안 질의 ○ 지역난방공사 및 우즈벡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 방안 질의
영사·기타	○ 홍범도 장군에 대한 우즈벡 고려인 사회의 평가 및 흉상 철거에 대한 반응 질의 ○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및 예산 현황 질의 ○ 우즈벡 내 고려인들의 현안 질의 ○ 고려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 당부 ○ 한글학교 지원 관련 현황 및 지원 확대 필요성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신대 우즈베크 유학생 강제 출국 관련 현지 반응 질의 ○ 금년 총선 투표율 및 재외선거 관련 애로사항 질의 ○ 행정직원 급여 임금 수준 현실화 관련 현황 질의

24) 주중국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북한의 사치품 수입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조 필요 ○ 중북관계 현황 및 한반도 상황 관련 중국 정부와의 소통 여부 질의 ○ 주중 북한대사와 접촉 여부 질의 ○ 한중 정상회담 및 우리 정상의 방중 가능성 질의 ○ 美 대선 관련 중국 정부의 입장 질의 ○ 한중 양국의 레드라인 관련 질의 ○ 주한 중국대사 인선 관련 질의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발생 원인 질의 및 문제 해결 위한 노력 당부 ○ 한중 청년세대 간 문화 갈등 격화에 대한 평가와 대처 질의 ○ 한한령 관련 현황 질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독립운동가 사적지 발굴 및 보존 노력 필요 ○ 대한민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 국가문화유산 등재 등 동북공정 시도에 대한 대처 부족 지적
경 제	○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각종 발언에 대한 의견 질의 ○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대사관의 역할 강화 당부 ○ 한중 간 공급망 핫라인 구축 관련 질의 ○ 중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사관의 해결 노력 여부 질의 ○ 중국 내외 각종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 재중 기업 감소 현상에 대한 분석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한중 간 기술수준 역전에 대한 이유 및 향후 대응을 위한 노력 질의 ○ 우리 기업의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 관련 질의 ○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공관의 대처 질의
영사·기타	○ 대사 부임 이후 양국관계 개선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질의 ○ 언론 브리핑 일방 취소 및 취재허가제 도입 등 문제점 관련 지적에 대한 의견 질의 ○ 대사의 외교활동이 적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질의 ○ 탈북민의 강제 북송 방지 위한 노력 당부 ○ 대사관 내 공급망 담당 전문가 부재 이유 질의 ○ 주중 대사와 상하이 총영사의 외교활동 횟수 차이에 대한 질의 ○ 공관 내 직원 충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질의 ○ 대사의 갑질 의혹 및 그에 대한 장관의 구두 주의 환기 조치에 대한 경과 질의

25) 주일본대사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정 무	○ 중의원 총선 관련 예측 질의 ○ 이시바 총리의 역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 질의 ○ 아시아판 NATO에 대한 의견 질의 ○ 2025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천황 방한 등 경과 질의 ○ 일본 측의 역사인식의 변화 유도 당부 ○ 사도 광산 관련 명부 확보 당부 및 추도식 관련 내용 질의 ○ 우리 정상의 일본 국민방문 추진 관련 질의 ○ 주평양 일본 정부 연락사무소, 북일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질의 ○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강화 및 일본 정부와의 소통 필요 ○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조선인 비하적 표현 상황 해결 필요 ○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ACSA) 체결 추진 여부 질의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진상규명 및 공동조사 요구 필요 ○ JDZ 협정 관련, 일본의 입장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경과 질의 ○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정상회의 의제화할 필요
경 제	○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 및 한중일 경제공동체로의 확대에 대한 의견 질의 ○ 일본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 관련 경과 질의 ○ 일본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관련 대사관의 입장 및 대응 방안 질의 ○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관련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이시바 총리의 성장형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 필요 ○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관련 질의
영사·기타	○ 한국 전체를 대변하는 균형 있는 역할 수행 필요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관련 대사관 차원의 노력 필요 ○ 일본 내 지진 관련 대사관의 대비 상황 질의 ○ 조선적 동포의 여행증명서 관련 상황 질의 ○ 대사관 직원의 장애인 응대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 ○ 일본 내 국외수감자가 많은 상황 질의 ○ 사건사고 담당인력 관련 현황 질의 ○ 형식적, 온정적 재외공관 인사평가 개선 필요 ○ 공관 내 부족한 어학역량에 대한 지적

(나) 산하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원사업	○ 증가하는 ODA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 취소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024년 4월 동티모르 출장 내 사고 경과 및 경비 처리 문제 지적 ○ 한의 의료인력 파견 확대에 대한 코이카의 계획 및 한의약 해외 확산을 위한 계획 질의 ○ 우크라이나 ODA 예산 미집행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질의 ○ 수원국의 현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한 ODA 수행 필요 및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수원국과의 논의 필요
기관 운영	○ 코이카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명 과정과 그들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지적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코이카 운영에 대해 강력한 우려 표명 ○ 언론기사에 따르면 손미정 코이카 상임이사는 개발협력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출 근거 제출 요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가 요구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 법제처의 확립된 의견인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필요 ○ 조직 및 인적 구성 개편의 필요성 질의 ○ 코디네이터 등 비정규직 운용 문제 질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채용면접 중 MBTI 등 비직무적 요소 평가의 공정성 문제 지적 ○ KDRT 현장 파견 대원 처우 개선 필요 ○ 해외봉사단원의 중도 자격박탈 사례 발생 시 해결방안 준비 질의 ○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 중 재외공관 설치 우선 조항 미수정 사유 질의

2) 한국국제교류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원사업	○ 수미 테리 사건 관련 KF의 입장 및 사업 개선 방안 질의 ○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메타버스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
기관 운영	○ 대통령의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이 감면되어, 부담금 감축에 대한 내부적 재논의 및 현실화를 위한 고민 필요 - 타 기금 전입이나 일반회계 예산 지원 등 방안 강구 필요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금액 확대를 위한 개선책 질의

3) 한·아프리카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 운영	○ 2023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예산 규정이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귀빈 대상 행사의 경우 오·만찬 집행단가를 현실화하라는 것이었으나, 지출한도를 없애버린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 - 관련 외교부 감사 시 교류협력부 부장에 대한 징계로서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전보조치하였는데, 징계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임을 지적

나. 통일부 소관

(가) 통일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통일 및 대북정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 러-우 전쟁도 '설마' 때문에 일어났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무력 대치도 우려되는바, 교류협력 및 한반도평화조성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 가치(자유, 인권)원칙외교가 비판받는데, 통일정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 북한군의 러-우 전쟁 투입상황에 대해 통일부 차관의 구체적 언급 부적절하다는 지적 - 북러 군사협력 증대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는 러시아, 북한의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세분석 역량을 보다 확대할 필요 ○ 통일부장관이 아주대 특강에서 '통일준비'를 언급했는데, 북한의 경제성장률 발표(한국은행) 및 농촌진흥청의 전년대비 식량생산 증가 발표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붕괴 조짐은 과도한 기대라는 지적 - 북한은 3.1%성장(남한은 1.4% 성장), 유류저장량 150만톤(1년치), 핸드폰 보유자 36%(약 700만명), 합계출산율 1.79명 등 경제가 죽지 않는다는 증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스웨덴 포함 18개국 대사 평양 복귀 등 ○ '8.15 통일독트린' 관련 - 8.15독트린에서는 자유, 북한주민만 보이는바, 8.15독트린은 나옴과 동시에 동력을 잃었고, 국제회의 개최로는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 -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바, 근본적인 부처 업무 검토 필요 - 평화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으며, 8.15통일독트린을 직접 집필했다고 밝힌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민주평통 행사에서 북한의 '3대혁명역량강화노선'과 '8.15통일독트린'을 비교하며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발상' 등으로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비유와 태도였음을 지적 -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긴 했지만, 8.15독트린은 실제로는 저항도 흡수통일 전략으로 대화 제안 아니라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 지적 ○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통일부 소관 과제가 거의 추진되지 않는 상황으로 냉정한 정세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며,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설 수 있는 논리로 '특수관계론' 유지 필요 ○ 북한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파기하고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일’이라는 용어도 삭제하며 국경선도 새로 그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독일 총선 결과, 극우정당이 2위, 사민당이 3위, 구동독 지역에서 극우정당이 압도적 1위를 한 상황을 보면 아직도 분단된 상태라고 분석되며, 이는 경제력 격차, 고립감,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바, 독일 사례를 고려하여 통일을 대비할 필요 ○ 북한의 ‘두 국가론’ 발언 관련, ‘민족’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우리가 다르다는 지적 ○ 북한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변화하거나 체제변화가 없거나 간에 모든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필요 ○ 통일부의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하고 있던 심리전과 같은 것인바, 통일부의 목적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임을 다시 확인하고 동 사업 수행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 <K의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 관련, 일부 영상이 통일과 무관한바 통일과 연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 ○ 북한의 ‘두 국가론’ 제시 및 NLL 문제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일정책에 대한 재평가 필요 ○ 국민통일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으로 국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국민의 불안은 정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 ○ 북한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희망할 수 있는바, 한미, 한중 관계와 관련 북한의 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통일부는 자문회의 위원의 이력서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지적 ○ 통일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부실 심사 지적 ○ 미국 국회의원 48명이 발의 및 서명한 평화통일법안에 대해 통일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 ○ 통일부장관의 워싱턴 한미일 북한인권 관련 회의 (10.17-20) 참석 관련, 국내 현안을 미루고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이정훈 교수(통일미래기획위원장 겸 북한인권증진위원장)가 최근 민주평통 주최 한-호포럼에 참석하여 미확인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부적절 지적 ○ 통일부의 정책이 남북간 긴장을 보다 심화시킨다는 지적
남북교류 협력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은 사례(오토 웬비어)를 고려하여 북한재산의 압류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구체적인 행동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필요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연락창구는 유지할 필요 ○ 남북회담시 물품 반출입 관련, 이적성 판단 위해 미술품 등 반입시 이를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기념품으로 반입하고 거액의 사례금을 보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 민간차원의 미신고 남북교류 제재(신고를 허가처럼 운영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사항 질의 ○ 남북경협 중단 피해보상 관련 - 남북경협 중단 피해보상에서 누락된 기업에 대해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 해결할 필요 - 개성공단 기업에 보상다운 보상이 주어지도록 추가적 보상 지원 검토 ○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지원 접촉기간 관련, 민간단체가 3~12개월의 접촉기간을 요청했지만 일괄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 질의 ○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 모색하고 운영 투명성 강화 필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록 주의할 필요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관련, 12월 말까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외국 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법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과 시행령 정비 필요 ○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청산인이 통일연구원 고용휴직 상태인데, 위법 여부 등 부적절한 청산인 고용 지적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관련 - 경문협은 공탁금을 개인·단체에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는바, 소송 패소 시 경문협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진행 여부 질의 - 경문협이 북한에 계속해서 저작권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지급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해당 공탁금을 사용할 필요
북한인권	○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여론조사 중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계 악화 및 긴장 강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71.6%로, 국민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 전환 검토 필요 ○ 북한인권 관련 5개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북한인권은 통일부의 중요한 업무(역할)에 해당하므로 북한 인권에 보다 비중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관련, 사법부의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필요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 북한인권보고서의 연도 누락, 사실관계 왜곡 등 부실 지적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자문위원회 발족 관련, 자문위원 이해충돌 및 예술특별고문의 경력 위조의혹 관련 질의
대북·대남전단	○ 남측의 대북전단, 북측의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의 입장 질의 ○ 전단 살포의 효과, 북한주민 반응에 대한 질의 ○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공항·철도 등 기반시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설에 낙하 위험 등 화재 및 교통대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대북·대남 전단살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권리이고, 그에 대한 국가인권위 판단도 있었으며, 북한주민이 보고싶어하는 내용인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는 오물풍선과 비교불가하므로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위해 유지 필요 ○ 대북·대남 풍선 맞대응 상황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관계에 통일부가 동참하고 있는 것인바, 문체부의 저작권법 위반 의견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상황 정리 필요 ○ 통일부 업무보고자료 내용 중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적 노력 병행" 문구가 삭제된 경위 질의 ○ 대북전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위반행위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적 지도 등 단속 필요 ○ 큰샘 등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민간인 출입통제지역 출입 행동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 필요 ○ 오물풍선의 주된 원인이 대북전단이므로,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자제 권고 및 단속 필요 ○ 오물풍선으로 국민 불안, 재산 피해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민 피해 최소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방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 대북전단 민간단체 간담회(6차례) 결과보고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 "해당 단체들이 규정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면담내용 중 비공개활동을 장려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 ○ 대북전단 관련하여 연천, 김포 주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북전단과 관련성이 더높은 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 ○ 민감정보 등이 담긴 USB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에 배포되고 있는데, 남북교류법에서 물품등 반입·반출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할 필요 ○ 정부차원에서 대북전단(풍선)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와 조치 방안, 통일부가 못할 경우 타부처에서 담당 필요 ○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 ○ 북한 오물풍선의 경로를 보면 결국 서울이 목표이고, 재난안전문자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바, 남쪽이 먼저 중단하면 중단한다는 북한의 메시지도 고려할 필요 ○ 기폭장치까지 넣어 보내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우리측 대북전단은 비대칭적인바, 이에 대응한 통일부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적극 저지 및 특별 관리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친정부 성향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 포상 수여 및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부추겼다는 문제 지적 ○ 전단 살포 탈북단체 등에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설명하고 관련 규정 등을 인지시킬 필요 ○ DMZ 통일촌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귀신곡소리 같은 방송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바, 지역주민들과 통일부장관의 추가 간담회 실시 및 대책 마련 필요 ○ 파주 주민간담회의 면담인사 부적절(실제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 아닌 지역의 이장만 만남) 지적 및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간담회 실시 필요 ○ 오물풍선 관련, 겨레얼통일연대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치 필요 ○ 통일부가 북핵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필요
이산가족 및 인도적 문제해결	○ 이산가족 생존자 중 고령자가 대다수이므로 영상편지 제작사업 활성화 필요 ○ 영상편지 보관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면서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점 지적 ○ 유전자 검사를 2~3세대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북한 억류자(6명)에 대한 생사 및 거처 확인 노력 필요 ○ 접경지역에 말라리아가 창궐 중인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 등 인도적 지원 필요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조사 관련 개인정보보호 문제 고려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만들고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연락두절된 대상자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처리가 지연되어 연락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필요 ○ 제2하나원 입소자 대비 관리인원 및 예산이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 화천 하나원의 관리운영 비효율 문제 지적, 서울 내 또는 근방에 소규모라도 시설을 만드는 방안 검토 필요 ○ 하나원은 가급 보안시설로서, 공사 관련 외부인으로 인한 하나원 시설 사진 공개 차단 및 보안서약서 보완 필요 ○ 하나센터 직영화 추진 관련, 센터 운영 평가점수를 보면 직영이 더 장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 복지사각지대인 상시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험군’ 탈북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통일부의 대처방안 마련 필요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탈북민 자살, 자살시도, 망명신청 현황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통일부의 정교한 정착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탈북민을 채용하려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재양성 계획과 구인-구직자 수요 매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부금사업 활성화 필요 ○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자료 이관과 개인정보 파기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관련 예산(3억5천여 만원)을 하나원 예산에서 전용하였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
통일교육	○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의 역할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역할이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통일교육원-유튜버 협업 영상에서 '22.12.19.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사일 발사 비용만 8천억원으로 3배 이상 올리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료에도 오류 없는지 점검 필요 ○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률 제고 노력 필요 ○ 통일부의 유니투어 앱 관련, 일부 내용이 통일과 관련성이 낮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통일부 조직	으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바, 시정 필요 ○ 러·북 관계가 강화되고 미·일·중·러 관계에 있어 중요성 있으므로 러시아 주재관 존치를 위한 추가 협의 필요 ○ 과거 남북교류협력 전면 중단 시기에 통일업무 법제화, 해외주재관 및 신규조직 신설 등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역량을 강화한 전례에 비추어 창의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조직을 강화해나갈 필요 ○ 남북관계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기보다는 통일부 역할을 꾸준히 유지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
기타	○ 통일사이버안전센터의 중국산 장비 사용 문제 지적 ○ 귀환 국군포로 2명이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대책 필요 ○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서해공무원 이모씨 피격사건에 대한 당시 정부(부처별) 대응 문제점들 열거하면서 정권 교체 후 부처마다 기존 발표내용(국방부의 자진월북 조작, 해경의 부정적인 사생활 발표 등)을 변경하였는바,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내용 중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재건설 의도 관련 내용에 관한 질의 ○ 대북송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므로 검찰수사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 ○ 거래말사업회 감사 이력 관련 문제가 있다는 지적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관련, '10년부터 '22년까지 12년 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진행하면서 3급 비밀로 관리했던 이유 질의 ○ 북한의 법령에 대한 우리측 연구 현황 및 대책 질의 ○ 통일부 차관의 법안소위에서의 발언에 대한 부적절 지적

(나) 산하기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 조민호 이사장은 스카이드일리 사임계 제출 후 '23년 3월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겸직 소지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탈북민(남, 여) 근속률 등을 비교하면 탈북여성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남녀 근속률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여성 탈북민의 가사분담이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은 일반국민의 1/6 수준임. 재단에서 자립자활지원, 교육개발 등 지원 사업의 예산 및 집행률은 거의 100%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 증가세를 보인 이유 및 하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필요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제21기 자문위원 구성 관련 질의 - 사무처장이 제청하는 인원의 증가 이유 및 그 근거 - 여성 참여비율이 저조한 이유 및 제고방안 - 청년분과위원장 선임 제한규정 및 정치적 중립의무 등 ○ 2030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바, 제21기의 경우 그 비율이 13% 수준이나, 제22기 구성 시 15% 수준까지 높일 필요 ○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간 역할이 중복되고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
지역협의회 운영	○ 지역협의회회의 ‘8.15 통일독트린’ 지지 내용의 현수막 게첩은 여론을 갈라치기할 수 있으므로 자제 필요 ○ 지역협의회 단위의 상조회비 모금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뉴질랜드(2022년), 시애틀(2024년), 토론토(2024년) 등 일부 지역에 분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사무처 차원의 조정 필요 ○ 공공외교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역협의회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 필요
사업 운영	○ ‘북한주민 맞춤형’ 콘텐츠 제작사업의 효과성 지적 ○ 국민통일여론조사 중 ‘향후 남북관계 전망’ 문항 삭제의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적절성 여부 질의 ○ 국민통일여론조사의 신뢰성 검증 필요
기타	○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관련 사 과 및 사퇴 촉구

라. 재외동포청 소관

(가) 재외동포청

1) 본 부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조직운영 및 제도개선	○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두고 광화문에 분원을 설치한 배경 및 이유에 대한 질의 ○ 재외동포청 인천분소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 지적 ○ 최근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 동포청 서비스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 경우 통합민원실이 분소 형태로 3개가 되므로 기존 서비스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필요 ○ 재외동포청 인천분소에 대한 최초 부지 선정 시 입지와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 우려 지적 ○ 해외 주재관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
기 타	○ 국내체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H2, F4 비자 관련 힘든 산업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조선족, 고려인 대상 H2취업비자 발급은 차별적이므로,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기 두가지 비자통합을 당초 2027년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국내 저소득 동포들에게 해외 재산과약 어려움으로 일괄 15만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과도함. 우리국민의 유사 소득층의 경우 7-8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바, 동포청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재외동포청 출범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동포 정책이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바, 동포 정책 추진에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동포 관련 업무가 통합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복지부, 동포청), 국내동포지원사업(법무부, 동포청), 동남아 귀환여성 지원(여가부, 동포청), 한글학교(교육부, 동포청) 등 ○ 재외동포 지원대상에 대한 단일한 정책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대상별 고려 필요

(나) 산하기관

1) 재외동포협력센터

구 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관 운영	○ 재외동포청의 인천 이전 및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서울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는지와 입지 결정 심의 상황에 대한 질의 ○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입지 결정이 추진 중인바, 현재 심의 단계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질의

7. 증인·참고인 명단 및 주요 신문내용

가. 기관증인

○ 외교부 본부 : 42인

직 위	성 명
장관	조태열
제1차관	김홍균
제2차관	강인선
국립외교원장	최형찬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차관보	정병원
대변인	이재응
공공외교대사	홍석인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의전장	김태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기후변화대사	(공석)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동렬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희
감사관	임동혁
부대변인	(공석)
조정기획관	송시진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인사기획관	황소진
의전기획관	(공석)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강영신
아세안국장	김동배

직 위	성 명
북미국장	홍지표
중남미국장	이주일
유럽국장	임형태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은정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국제법률국장	황준식
공공문화외교국장	서빈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한민영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외교정보기획국	박장호
한반도정책국	이준일
국제안보국	윤종권
국립외교원기획부장	이문배
국립외교원교수부장	고재명

○ 통일부 : 13인

직 위	성 명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대변인	구병삼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남북관계관리단장	강연서
국립통일교육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김선진
감사담당관	김희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4인

직 위	성 명
사무처장	태영호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공석)
위원지원국장	(공석)

○ 재외동포청 : 5인

직 위	성 명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김민철
교류협력국장	(공석)

○ 한국국제협력단 : 5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사업전략·지역사업 I 본부장	이운영
지역사업 II 본부장	홍석화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장	손정미

○ 한국국제교류재단 : 3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김기환
기획협력이사	이종국
교류협력이사	이종국

○ 재외동포협력센터 : 2인

직 위	성 명
센터장 상근이사	김영근 이영근

○ 한·아프리카재단 : 2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상근이사	김영채 임재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2인

직 위	성 명
이사장 사무총장	조민호 이주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1인

직 위	성 명
회장	정낙근

【 미주반 】

○ 주미국대사관 : 1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조현동
공사	외무공무원	김준구
공사	외무공무원	안세령
공사	외무공무원	김학조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조기중
공사참사관	주재관(문화홍보)	박종택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김성열
공사참사관	주재관(보건복지식약)	김충환
공사참사관	주재관(농림축산)	김원일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이제훈
공사참사관	주재관(교육)	강병구
국방무관	재외무관	(공 석)

○ 주UN대표부 : 6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황준국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김상진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조현우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박준병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서민정
공사참사관	주재관(법무법제)	이수창

○ 주뉴욕총영사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특임공관장	김의환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이상호
부총영사	주재관(재정경제금융)	박문규
영사검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김천수

○ 주멕시코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허태완
공사	외무공무원	이호열

○ 주과테말라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김득환

○ 주엘살바도르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추원훈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이상열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김영완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권성환
영사점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정상원

○ 주샌프란시스코영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임정택
부총영사	외무공무원	나상덕

【 구주반 】

○ 주OECD대표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최상대
차석대사	외무공무원	최영배
공사	외무공무원	최성요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이호근

○ 주프랑스대사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최재철
공사참사관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김병준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이일열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신석홍

○ 주벨기에대사관(겸 주EU대사관 및 주NATO 대표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유정현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강주연
공사	외무공무원	유재훈
국방무관	재외무관	박성호

○ 주유네스코대표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박상미

○ 주스페인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임수석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장현철
국방무관	재외무관	김기수

○ 주포르투갈대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조영무

○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 1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총영사	외무공무원	박영효

○ 주알제리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국방무관	외무공무원 재외무관	유기준 구자진

○ 주튀니지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이태원 김남혁

○ 주이집트대사관 : 2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점총영사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김용현 최병선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4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국방무관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 재외무관	최병혁 문병준 김대환 진철호

【 아주반 】

○ 주중국대사관 : 15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정재호
공사	외무공무원	김한규
공사	외무공무원	유복근
공사 겸 총영사	외무공무원	이경덕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구태훈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안동욱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류인식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이재근
공사참사관	주재관(과기정통방송)	이진수
공사참사관	주재관(환경)	조은희
공사참사관	주재관(국토교통)	오원만
공사참사관	주재관(재정경제금융)	배정훈
공사참사관	주재관(법무법제)	정재신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김진곤
국방무관	재외무관	양윤철

○ 주일본대사관 : 9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특임공관장	박철휘
공사	외무공무원	강명일
공사	외무공무원	김장현
공사참사관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김현숙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문영주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이한상
공사참사관	주재관(산업통상자원)	서가람
공사참사관겸문화원장	주재관(문화홍보)	공형식
국방무관	재외무관	지동욱

○ 주인도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장재복
공사겸총영사	외무공무원	임상우
공사참사관	외무공무원	김민선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3인

대외직명	구 분	성 명
특명전권대사	외무공무원	원도연
공사참사관겸총영사	외무공무원	국장현
국방무관	재외무관	손태국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일반증인 : 12인

[출석일 및 장소 : 10.24.(목), 국회]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 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여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통일부	대북 usb 물품 살포와 사유, 자금 지원 단체, 현행법 저촉 여부 및 통일부 북진정책에 대한 의견 확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지방 정기모임 행사 주최)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폐기물 책임연구원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출석
김영재	유네스코 협상팀장	외교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어떠한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하였는지 확인	출석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	외교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경위 확인	출석(화상)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질의	출석
박정오	큰샘 대표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질의	출석

박정욱	주캄보디아대사	외교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우리 국민 보호 요청 외면 문제 검토	출석(화상)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외교부	민주연구원 주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긴급토론회 참석 경위 관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세미나 발표)
서민정	전 외교부 아태국장 현 주노르웨이 왕국대사	외교부	강제동원 제3자변제안의 구상과 추진, 법리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	출석(화상)
손혁상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자회사 감사 미실시로 인한 기관 방만경영 방조	출석
장연식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선임연구원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해외 출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민주당의 괴담선동 및 사회불안 야기에 대한 과학계, 산업계 입장 표명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세미나 발표)

○ 참고인 : 2인

[출석일 및 장소 : 10.24.(목), 국회]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감사대상 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여부
김영숙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상임이사	재외동포청	국내체류고려인동포 관련 정부의 지원 미비 지적	출석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외교부	후쿠시마 관련 질의	출석

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주요 신문내용

대상	주요 신문내용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방사능폐기물 책임연구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핵폭탄 실험 시 방출되는 방사선량 비교 가능여부 및 방사선량 차이에 대한 질의 (과거 미국, 영국, 프랑스가 태평양에서 918회(소형 600개, 대형 318개)의 핵폭탄 실험을 진행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안전기준 초과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소문(세습 우럭, 방사능 물고기 등)이 퍼져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 IAEA 기준이 승인된 원전에만 적용되고 사고 원전 방류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요청 ○ IAEA 보고서가 과학적 보고서가 아닌 정치적 용역 보고서라는 주장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견해 질의 ○ 사용후핵연료 제거 전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범죄행위이며 오염된 농수축산물의 수입 금지 지속 요구에 대한 견해 질의 ○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일부 인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괴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사능 테러라고 생각하는지와 ‘핵폐수 방류’라는 표현에 대한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삼중수소 양과 한국, 미국, 일본의 삼중수소 관련 배출기준 비교에 대한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선전과 선동에 대한 견해 및 선전과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산 질의

김영재 유네스코 협상팀장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유네스코의 기념물 및 유적 보호에 관한 자문기관)의 보류 권고(3월 13일)를 활용하여 일본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 ○ TF 발족(3월 26일) 이후 일본에 친화적인 대사(윤덕민)가 니가타에 방문하고 TF팀이 여러 차례 파리와 도쿄를 방문했으나 사도광산에는 방문하지 않은 점 지적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대사의 연설내용과 대사의 연설내용이 매우 유사한 이유에 대한 질의 ○ 대사의 연설문 작성 또는 검토 시 일본 대사의 연설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 ‘강제노동’ 키워드가 빠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 유무, 일본 대사와 외무성이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연합 대표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이유, 대북전단의 효과, 북한오물풍선과의 상관성, 항공안전법 등 관련 국내법 준수 여부, 향후 실정법 준수 의향 등에 대한 질의
박정오 큰샘 대표	○ 큰샘이 쌀 등을 패트병에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내는 이유와 그 효과,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 여부, 해양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국내법 준수 여부, 향후 실정법 준수 의향 등에 대한 질의
박정욱 주캄보디아대사	○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유치단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을 보았는지 여부와 유치위원회와 외교부 간의 협업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서민정 전 외교부 아태국장 현 주노르웨이 왕국대사	○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안 결정 당시 담당 국장이었는지 여부 및 작년 3월 민주당 보좌진 설명회에서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구성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에 대한 질의 ○ 정부가 구상권 포기를 결정할 당시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구상권 불행사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에 대한 질의 ○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금덕 할머니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외교부의 문제 제기로 결정이 지연 및 보류된 이유에 대한 질의
손혁상 前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손정미 이사가 맡은 업무 분야(인도적 지원, 재난 문제, 질병 퇴치 등)에 대해 코이카 내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와 그와 같은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임명될 경우의 영향에 대한 질의
김영숙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상임이사	○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그동안의 재외동포청의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 ○ 현장에서 느낀 정부 지원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질의 ○ 안산 지역 고려인 거주자 수와 현황에 대한 질의 ○ 고려인들이 한국어 소통 문제로 겪는 어려움과 고려인 문화센터의 상담 업무 상황에 대한 질의 ○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재외동포청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여부 질의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국한 고려인 피난민 수와 이들의 체류 상황, 난민비자로 인한 생활 어려움 및 지원 여부에 대한 질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오염수 방류 장기화에 대한 질의 ○ 일본의 핵 전문가가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하는 데 170년이 걸린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IAEA 보고서의 오염수 방류 기간 30년의 내용에 대한 질의 ○ IAEA의 주장대로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제기준에 대한 질의 ○ 도쿄전력의 2051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계획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의 제거가 어려워 폐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후쿠시마 오염수의 영향으로 오염수가 한반도 해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 ○ IAEA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용역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질의 ○ IAEA 내부의 전문가 부족으로 복잡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 ○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 골재, 고철 등을 차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의견 요청 ○ 체코 원전 건설비용과 관련된 덤핑 수주(마이너스 입찰) 근거 설명 및 적자가 날 경우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
---------------------------------	---

8.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외교부 소관

(가) 외교부

1) 본 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외교부장관 긍정동 공관 이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과 관련한 공문서 제출할 것
- 2024년 2월 예정된 독일과의 정상회의가 우리 측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바, 해당 위약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제3자 대위변제안)과 관련된 로펌 자문 결과를 제출할 것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의 공관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 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러시아에 억류된 민간인 상황과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철

수 사례를 포함하여,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금년 ODA 예산 증가와 관련하여, 5대 유엔 협력기구(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에 지원된 금액 중 북한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최근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매뉴얼 운영, 사건 처리 및 조치 내용, 그리고 작년과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내용, 일자, 참가자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
- 2022년 11월 영부인의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유네스코 TF팀의 출장 기록을 제출할 것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담조직을 마련할 것
-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TF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 친한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연수 사업(ODA)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조실에서 통합 관리 중인 약 30개 기관의 연수사업 명단을 코이카와 외교부에 공유할 것
-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등 ODA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사도광산에 전시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자료들 중, 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의 미지급 임금이 예탁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이 명부에 대해 확인, 확보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故 지식주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필리핀 경찰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유가족에게 필리핀 정부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외교정보기획국이 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정보 커뮤니티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
- 역대 정부에 비해 군 출신 특임공관장이 많은데, 외교적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임공관장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 98%의 재외공관에 도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로 전자파 차폐 방식으로, 신속히 전 공관에 첨단장비인 레이저 도청방지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
- 현재 코이카 소유 두 곳의 남미농장이 방치중인 상황으로,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야따마우까 농장의 경우 46년째 매년 25만불의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바, 민간 임대를 통한 개발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명예영사 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되도록 ‘주한명예영사인가에 관한 예규’를 보완할 것
- 현재 주한명예영사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리하여, 주한명예영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사이버 보안법 강화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국격에 걸맞은 공적 개발 원조(ODA) 확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 해소를 통해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바, 보건 ODA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다자보건기구

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적극 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
- ODA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 물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물품'으로만 표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충분히 공개 가능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사유로 '외교적 사안'이라고 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유네스코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전 세계에 12개의 새로운 외교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열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3월과 10월에 열린 공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
- 부산엑스포 판세 메시지의 3급 비밀 지정이 적절했는지,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예고문 변경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 부산엑스포 판세 메시지 전문 유출에 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유엔인권협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이행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과잉 의전과 관련하여 주네덜란드대사관의 전문을 공개할 것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인사 추천 서류 및 특임공관장심사위원의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2023년 12개 공관 설치와 관련 공관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제출할 것
-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배부한 것에 대한 공식 기록 차원의 우리 정부의 항의를 제출할 것

- 외교부 교재 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등 오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 보고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것
- 국유재산 관련 공문, 세입세출에 관한 공문, 국내 부처 간 행정 업무에 관한 공문 등의 자료가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제출할 것
- 국제정세의 급변, 일본이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 우리도 자체 핵무장 추진을 검토할 것
- 최근 한일관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양국 국민들이 상호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바, 한일 간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제도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일본의 수송기 등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며 新한일관계, 성숙한 모습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희토류 등 광물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준비할 것
- 핵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미 대선 전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것
- NLL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미국 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의원들과의 한반도 평화 촉진을 위한 토론 등 더 많은 지지 획득 방안을 모색할 것
- 일본 시민단체가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식화한 행사 추진을 검토할 것
- 우천사(유텐지)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 275위의 송환을 위해 일본과 협의할 것
- 일본은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재원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리 기업의 러시아 철수 등의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아프리카지역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내용 간 편차가 있는바, 아프리카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할 것
- 정부가 사용하는 외교 안보 구호인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는 자기 과시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소지가 있는바, 이 용어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점검할 것
- 한일 간 출입국절차 간소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동 관련한 논의를 중단할 것
- 최근 한중 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새로이 들어설 미국 행정부 및 일본 내각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배소 판결 강제집행 관련, 일본의 수령 거부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 각하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
- 일본의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과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7광구 문제를 외교적·경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
-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과 독도 망언의 지속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헤즈볼라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을 고려, 레바논 동명부대의 선제적 철수를 검토할 것
-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비할 것
- 트럼프 이후 미국의 경제·무역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것
-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 14명의 유해에 대한 분사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할 것
-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응하는 외교 언어 사용에 있어 외교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
- 웨스팅하우스의 요구에 따른 체코 원전 수주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우리 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할 것
- ODA의 컨트롤타워가 없으므로 외교부와 KOICA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
- 유상 ODA와 무상 ODA가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무상 ODA의 경우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각각 진행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 ODA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바,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것
- 작년부터 기재부의 對미얀마 EDCF 사업이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미얀마 인도적지원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OICA나 외교부가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여건을 마련할 것
- 사도광산 전시관의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표현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지적하고 '조선인'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할 것
-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사이의 차별점 및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할 것

2) 주미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소벤처지원협의회, 경제안보 전문관 제도 관련 구체 애로사항 해결을 노력할 것
- 대사관 애로 및 건의사항(행정직원 처우 개선, 청사 노후화, 핵심신흥기술 및 공공외교 전담인력 확충) 해소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
- 북한 비핵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를 노력할 것
- 변화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마련할 것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 체코 원전 수주 관련, WEC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한미 의회교류센터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 대사관 내 외교부와 정보기관 간 업무 분장을 할 것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내 전시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할 것
- 광역 지자체 차원의 한미 문화교류를 확대할 것
-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재외국민 안전 전담 경찰 주재관의 총영사관 파견을 확대할 것
- 플로리다 주 내 출장소 재개설을 검토할 것

- 행정직원 급여 문제를 개선할 것
- 청사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

3) 주유엔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이스라엘 관련 사태 진정을 위한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 행동을 모색할 것
-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의 행위가 제재 위반 여부인지 정리해서 보고할 것
-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명, 의료, 식량 접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전략을 확보할 것
- 다중적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젠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무대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것
-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의 동향을 본국에 전달할 것

4) 주뉴욕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문화원 정식 개원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

5) 주멕시코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황 및 예산 심의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외통위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 국세관 신설 및 몬테레이 분관 문제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할 것
- 멕시코 정부, 의회 및 차세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
- 주요 대학 내 한국어학과 설치 확대를 모색하고 한류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 멕시코와 같은 중견국과 지역 질서 형성 기여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쿠바 방문 시 美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불가에 대한 공지를 할 것
- 쿠바 내 문화외교를 추진할 때 협업을 모색할 것
- 한-멕 FTA 진행 시 공동 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할 것
-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FTA 해법을 모색할 것
- 소노라 지역 한전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살필 것
-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하고 사업을 발굴할 것

6) 주과테말라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과테말라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및 한국 수업 등을 지원할 것
- 한-중미FTA 발효 시 관련 사항에 유의할 것
-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의 협조에 노력할 것
- 초청연수 등을 통해 지한파, 친한파 육성에 힘쓸 것

7)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탄소 배출 감소 노력과 관련하여 중미 국가들의 협력 사안을 공유할 것
- 한-중미 FTA의 긍정적 효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
- 엘살바도르 내 CCTV 종합 관제센터 설립 등 성과가 중미 지역 전체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치안 상황 평가 시 범죄지표 활용, 치안 정책 자문관 파견, 경찰 엘리트 유학 등을 통한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전파할 것

8)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에너지 협력에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분의 국외감축분 확보를 감안하여 추진할 것
-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9)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 교과서에 대한 한국의 역사 및 발전상 반영 등 우리의 소프트파워 확산 방안에 대한 현황 및 전략 아이디어를 보고할 것
- 65세 이상 국적 회복 및 신청 현황 자료를 보고할 것
- 재외동포청 영사 및 순회영사 인력 및 예산 확충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것
- 관할지역 한인의 마약 중독, 투옥, 범죄연루, 국내 출입국 등과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다육 식물(두들리에) 사건 관련 범죄 혐의자에게 긴급여권이 발급된 경우 자료를 제출할 것
- 유학생 졸업 후 노동 착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현황을 외교부 등에 보고하고 본부와 협력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0)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공관 사무실 추가 확보와 행정직원 처우 개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것
- 미국 교과서 내 한국의 역사 및 발전상 반영 등 우리의 소프트파워 확산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현황 자료를 보낼 것
- 유학생 취업 지원 사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 전세계 평균 대비 낮은 재외선거 등록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1) 주오이시디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오이시디 사무국 내 파견자 직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

12) 주프랑스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프랑스 주재 한인 프로덕션의 유학생 임금 체납 관련 경위 파악 및 우리 유학생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할 것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예산 내역을 제출할 것
-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해 관심을 제고할 것
- 대사관 SNS 내 유용한 정보 게시를 확대할 것

13)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급망실사지침 발효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할 것
-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토록 방안을 마련할 것

14) 주유네스코대표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도광산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 및 등재 결정 취소 혹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보고할 것

15) 주스페인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가적 과제나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방향에 참고할 만한 주재국의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는 정기 정세 보고에 포함하고, 국회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마드리드 한인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16) 주포르투갈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포르투갈 혼인제도 및 연금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건의 또는 애로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양국 간 의회외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17)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코너’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18) 주알제리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관의 정기 보고 시,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보고할 것
- 구매력에 근거한 알제리와의 경제협력을 진행할 것
- 알제리와의 광물 협력 관련 대화를 추진할 것
- ODA에 대한 마구잡이식 사업 확대 대신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도모할 것

19) 주튀니지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선거 제도 관련 개황 책자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국회에도 경제협력 분야 중 유망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보고 및 주재국 정세경제 상황에 대한 심층보고를 주기적으로 할 것
- 공관 차원에서 회의 어젠다를 개발할 것
- 공관에서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본국에 주재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KOICA 사업 관련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본부에 제기하고 공관 차원에서 밀도 있는 준비를 할 것

20) 주이집트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주사우디대사관과의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관 통신 환경을 개선할 것
- 이집트에 대한 우리 방산 수출을 위해 공관 차원의 노력을 진행할 것
-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21) 주사우디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벤처공동펀드의 우리 기업 지원조건, 실제 지원실적 등을 제출할 것
- 우리 국민 사건사고 상세 현황을 제출할 것
- 대사관 정비소요 예산 필요사항을 제출할 것
- 네옴시티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공관 차원에서 대처할 것
- 원유 결제화폐 문제 관련하여 공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주인도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사관 인력 보강 필요성 및 구체인력 보강 소요를 보고할 것
- 對인도 공공외교 전략 및 기대효과 등을 보고할 것
- 재외공관원 처우 관련 현장 고충을 정리 및 보고할 것
- 인도의 IPOI 추진 현황과 참여국 등을 보고할 것
-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LG화학공장 유독물질 누출이 양국 관계 악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것

23)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외공관 인력 현황에 대해 어떤 분야 인력이 부족하며 어떤 역량을 위해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출할 것
- OECD DAC 관련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선진국들의 현황을 보고할 것
- 고려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4) 주중국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
-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중측이 실효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할수 있도록 촉구할 것
- 외교부의 재외공관근무수당 조정 및 인력 보충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
- ESS 산업 등 재생에너지 관련 중측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 이익을 돌파구로 삼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
- 북한의 사치품 수입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조할 것
- 한한령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중국 사정에 밝은 언론인과 적극 소통할 것
-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사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미국 신정부 출범에 있어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것
-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를 신중히 관리하기 위해 대사가 발언을 신중히 할 것
- 한중 양국이 레드라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
- 탈북민들의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

- 탈북민에 대한 정책상 한중 간 인식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한중 간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난징 리지샹 위안소와 관련하여 대사로서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 상하이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독립사적지 표지석 오류 등 중측과 협의를 위해 보훈관 공석 문제를 해결할 것
- 핵심품목에 있어 대중국 의존이 여전히 크고 4차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중국 우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
- 미국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EU 공급망 실사법 등 여타국의 대중 무역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업 지원을 노력할 것
- 중국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에 유의할 것

25) 주일본대사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라인야후 1차 행정지도 관련 외교부가 과기부에 공문을 송부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할 것
- 야당의 입장을 레버리지로 삼아 한일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대사로서 ‘일한’ 과 같은 표현을 자제하고 한국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균형 있는 역할을 할 것
- 우키시마호 관련 추가 명부 확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공동 조사, 유엔지 한국인 유해 275위 봉환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대북정책 관련 한일 정부 간 긴밀히 조율한 후, 미국 신정부와의 협의해 한미일이 일치된 정책을 추진할 것
- 이시바 총리의 방위안보 관련 지론들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
-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 내용 중 조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해결할 것
-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 일본 기업들이 한일 미래기금 외에, 재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후방기지가 위치한 일본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한일 간 ACS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해 진상규명 및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1.5트랙 대화 추진을 검토할 것

- 아미 베라 美 하원 의원이 제안한 한미일 JDZ 공동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것
- 일본의 2025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사관 차원에서의 대책을 련할 것
- 일본의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정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본국에 보고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
- 주재관들의 업무 난이도, 피평가자의 업무실적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방안 등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차등하게 인사평가를 할 것
- 2010.11.14.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일본 총리가 한일 도서협정에 대한 서명을 통해 조선 왕실 의궤를 반환받았으나,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되었음에도 약탈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을 정상회의 의제로 올린 적이 없으므로 이를 문화원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것

(나) 산하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코이카 인턴(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YP)) 채용 면접 과정에서 MBTI를 질문하는 등 비직무적 요소를 채용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 손정미 상임이사 선정과 관련한 심사결과표, 비식별처리한 최종 후보 10인의 이력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할 것과 제출 불가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할 것
- 손정미 상임이사 선정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의적인 편집과 연기, 거부 등이 있었음에 따라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한 충실성을 제고할 것

2) 한국국제교류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이 연간 구매액 대비 1% 이상 달성해야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전년대비 3.2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구매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대통령의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이 감면된바, 타 기금 전입이나 일반회계 예산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코이카에서는 AI 가상인물 ‘버추얼 서포터즈’ 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메타버스 이용자 추이 대비 비용 투입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AI 산업이 부상하는 현재의 흐름에 맞춰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

3) 한·아프리카 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퇴임한 이사장의 업무 추진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외교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입 교류협력부 부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통일부 소관

(가) 통일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무력 대치도 우려되는 바, 통일부는 교류협력 및 한반도평화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
 - 북러 군사협력 증대가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일부는 러시아, 북한의 정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세분석 역량을 보다 확대할 것
-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통일부의 근본적인 부처 업무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
- 현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통일부소관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냉정한 정세인식과 판단 필요하며,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설 수 있는 논리로 '특수관계론'을 유지할 것
- 북한최고인민회의의 결과와 관련하여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통일'이라는 용어도 삭제하며 국경선도 새로이 그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의 독일 총선 결과 등을 분석하고,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을 대비할 것
- 통일부의 목적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임을 확인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확대 사업 수행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 <K의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을 통일과 연관성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

- 북한의 '두 국가론' 및 NLL 문제 등 제반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일정책에 대해 재평가할 것
- 한미, 한중 관계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 통일부는 자문회의 위원의 이력서를 반드시 받을 것
- 통일부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부실심사, 대책을 마련할 것
- 미국 국회의원 48명이 발의 및 서명한 평화통일법안에 대해 통일부가 관심을 가질 것
- 북한 관련 외국어서적의 재외공관 배포사업에 특정인의 서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정보접근권 확대 등 대북심리전 활동보다는 통일정책,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정책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은 사례(오토 워비어)를 고려하여 북한재산 압류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것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연락창구 유지할 것
- 남북회담 시 기념품으로 반입하고 거액의 사례금을 보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고발 등 조치를 할 것
- 남북경협 중단 피해보상 관련
 - 남북경협 중단 피해보상에서 누락된 기업에 대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것

- 개성공단 기업에 보상다운 보상이 주어지도록 추가보상 지원을 검토할 것
-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것
-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및 동 법 시행령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을 정비할 것
- 통일연구원 휴직 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청산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고용휴직 관련 인사제도·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련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공탁금을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의 개인·단체에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경문협 소송 패소 시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등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 해당 공탁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회와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역할이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검토할 것
- 통일교육원-유튜버 협업영상에서 연합뉴스 기사(22.12.19.)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료들에도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것
-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통일부의 유니투어 앱 관련, 일부 내용이 통일과 관련성 적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바, 시정할 것

-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단체(NKDB)의 하나원 출입, 인권조사 등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려할 것
-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직(안전지원팀 → 안전지원과)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공사 관련 등 외부인으로 인한 하나원 시설(가급 보안시설) 사진 공개 차단 필요한바, 보안서약서를 보완할 것
- 화천 하나원의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인바, 서울 내 또는 근방에 소규모라도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나센터 직영화 추진 관련, 센터 운영 평가점수를 보면 직영이 더 장점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직영화 추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 상시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험군’ 탈북민에 대한 통일부의 대처방안을 강화할 것
- 탈북민 자살, 자살시도, 망명신청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일부의 정교한 정착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
- 탈북민을 채용하려는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재양성 계획과 구인-구직자 수요 매칭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부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통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자료 이관과 개인정보 파기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면밀히 대응할 것

-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를 위한 하나원 예산의 전용 등과 관련, 중점 사업의 경우 사전에 정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
- 통일부 직원의 징계 중 성비위와 갑질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것
- 점점 낮아지고 있는 통일필요 인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북한당국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공개한 의도 등을 분석할 것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등 해결방안 강구할 것
-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에 적극 대처할 것
-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시, 정확성 및 구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북한 오물풍선의 살포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할 것
- 북한의 무인기 주장 관련,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검토할 것
-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등 실정법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시킬 것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대북전단 활동과 연계되지 않도록 할 것
- 북한 어린이 백신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공여를 검토

할 것

- '중학생 30명 공개 처형'(TV조선 보도) 등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할 것
-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인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것
- 향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단체 선정 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
- 자체 핵무장 등을 포함한 생존전략 마련할 것
- 대북전단 및 대남오물풍선 관련,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
-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을 모색할 것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의 고통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인권센터 건립 자문위원 위촉 및 예술특별고문 추천과 관련하여 다시 살펴볼 것
- 북한 억류자의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인권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로, 탈북민 사업은 행정안전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주 이용층(10대)에게 맞

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할 것

-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 사업이 민주평통해외협의회 사업과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할 것
- 러·북 관계 강화 및 미·일·중·러 등 통일외교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러시아 주재관 존치를 협의할 것
- 과거 남북교류협력 전면 중단 시기에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역량을 강화한 전례를 참고하여, 창의적인 업무 발굴 및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통일사이버안전센터의 중국산 장비사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귀환 국군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산하기관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스카이드일리 사임계 제출 후 '23년 3월 재단으로 부임한 조민호 이사장은 겸직 소지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 탈북민을 위한 자립자활지원, 교육개발 등 지원 사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일부 해외지역의 분규 상황에 대한 조정(해소)할 것
-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간 역할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제22기 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및 2030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민적 여론수렴 및 합의도출 등의 역할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주민 맞춤형’ 콘텐츠 제작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상조회비 등 지역협의회 모금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수 지역협의회에 대한 다양한 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
- 국민통일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할 것

라. 재외동포청 소관

(가) 재외동포청

1) 본 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내체류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H2, F4 비자 관련 조선족, 고려인 대상 H2취업비자 발급은 차별적이므로,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기 두가지 비자 통합을 당초 2027년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내 저소득 동포들에게 해외 재산과약 어려움으로 일괄 15만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과도한바, 재외동포청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여 이를 개선할 것
- 동포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어 동포 정책 추진에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동포 관련 업무가 통합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외동포재단 시절 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서 활동하던 재외동포 전담인력(7인)이 재외동포청 승격 후 현지로 재과전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재외동포 중 독립유공자 후손, 강제징용 피해자, 이주 후손, 산업화 시기 경제 교류에 기여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 재외동포 중 범죄도피자나 탈세자, 병역 기피자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재외동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법령을 정비할 것

(나) 산하기관

1) 재외동포협력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사업 대상인 재외동포의 접근성·편의성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소재지(입지)를 결정할 것